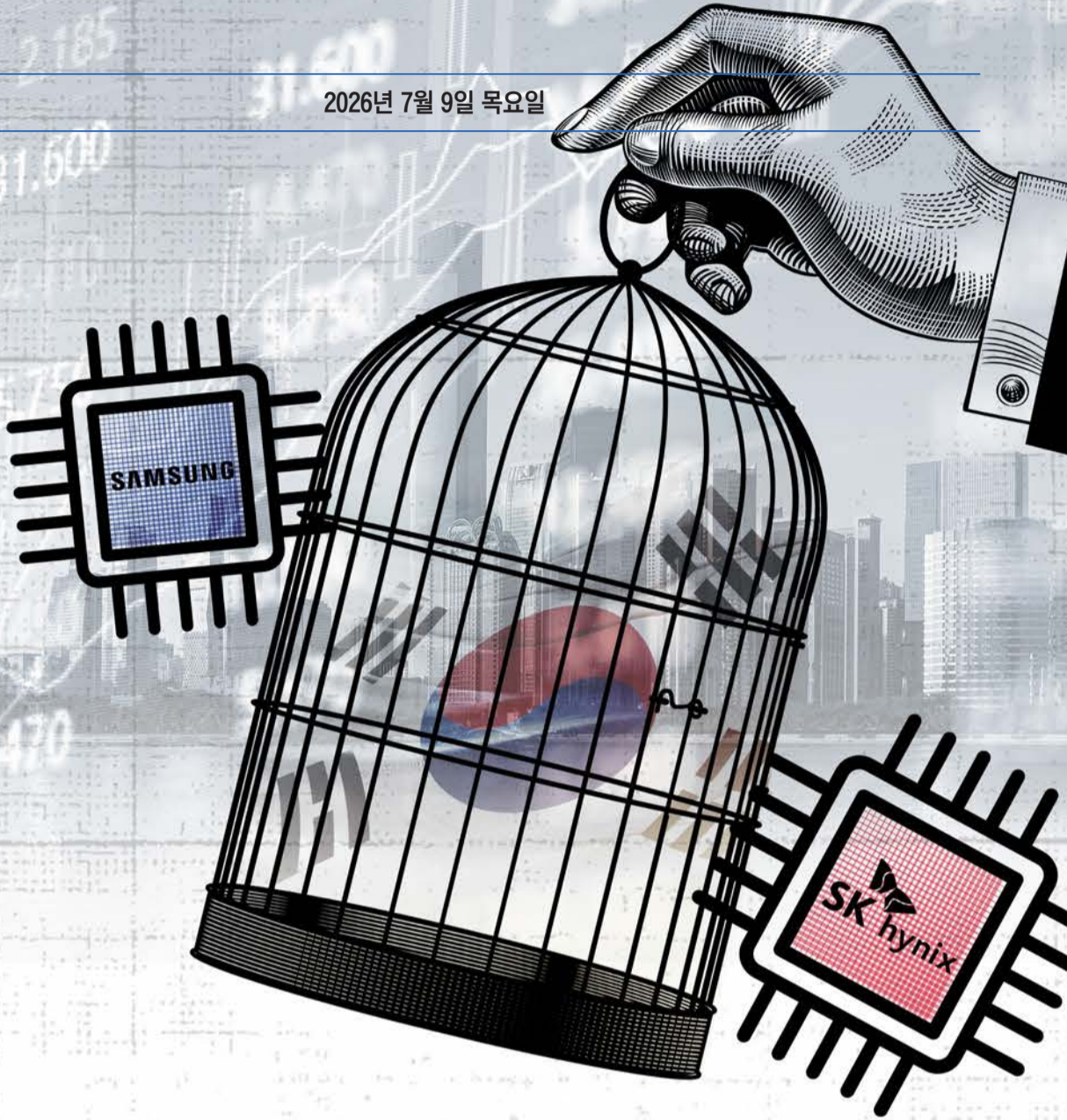


반도체 '투톱' 삼성전선에 저당 잡힌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



“韓 대규모 투자, 종말의 시작” ‘AI 고점론’에서 다시 랠리 기대된다며 주가 변동성 고도로 높아져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주가는 다시 하락세 800조 호남 투자 등 정치도구화된 반도체 반도체에 쏠린 유동성에 여타 산업들은 무관심 삼성전자 사이클 하락 대비할 ‘플랜B’ 전무

국가의 명운을 단 하나의 산업에 전부 건 듯하다.

6월 말, 이재명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공식화하며 촉보를 터뜨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하는 메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며 이를 국가적 차적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철저한 경제 논리를 넘어, 거스를 수 없는 ‘정치적 명분’으로 자리 잡은 형국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문이 채 식기도 전에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그널은 정반대를 가리켰다. AI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던 메타(Meta)가 데이터센터의 남은 연산 자원을 외부로 돌리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AI 반도체를 매입하던 빅테크마저 컴퓨터 자원의 공급 과잉을 겪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성장의 신호가 아닌 ‘정점(Peak)’으로 해석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AI 인프라에 투입된 1조 달러가 적절한 투자수익률(ROI)을 증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모건스탠리도 고객들에 발송한 보고서에서 반도체주의 실적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단기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줄이려”고 조언했다.

시장을 지배하던 ‘AI 반도체 수요의 무한 팽창’이라는 대전제에 금이 가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의 주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궤적을 그릴 것이란 전망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어닝시즌을 맞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분기 영업이익을 단숨에 넘어서는 89조 원대의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제자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다. 방향성을 좀처럼 읽을 수가 없다.

주가 우상향 과정에서 수반되는 폭등과 폭락의 잦은 변동성을 시장이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명심해야 한다.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상반기에만 수십 차례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비정상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극심한 리스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정치적 도구화에만 앞장서고 있다. 한때 님비(NIMBY)의 대명사였던 반도체 공장 유치에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면서, 호남권 투자 역시 산업적 합리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할당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첨단 팹 가동에는 원전 수기에 맞는 전력과 하루 100만 톤 이상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기존 수도권 산단조차 인프라 확보에 난항을 겪는 마당에, 기반이 취약한 서남권에 단기간 내 거점을 뒤흔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자본시장의 왜곡은 한층 더 심각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최근 55.3%로 치솟았고, 거래대금 비중은 63.5%에 달한다. 시중 유동성이 반도체라는 단일 테마로 빨려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에 베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거래 쏠림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국민성장펀드조차 포트폴리오 분산이라는 기본을 잊고 반도체 섹터에 편중되면서 시장의 정상적인 자금 배분 기능은 마비된 상태다. SK하이닉스의 ADR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관련 파생상품이 또 늘어날테고, 그만큼 변동성은 더 커질 거라는 전망들이 수두룩 하다.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면 되지, 힘들게 밀을 따내면 뭐하냐”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시장을 뒤덮었다.

TSMC라는 단일 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 대만의 현주소는 우리의 훌륭한 선행 지표다. 대만은 경제성장을 TSMC에 의존한

대가로 극심한 전력·용수 부족을 상시 겪고 있으며, 국가의 모든 자본과 우수 인재가 편중되면서 타 산업의 편더멘털이 고갈되는 ‘산업 생태계 양극화’가 고착화됐다.

우리 역시 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국가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철저히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치인 석유화학 산업, 막대한 친환경 전환 비용을 떠안은 철강 산업, 캐즘에 직면한 이차전지 산업 등 뼈를 깎는 체질 개선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반도체 쏠림이 빚어낸 왜곡은 실물 경제와 사회 전반으로도 전이됐다. 두 기업이 쏟아내는 막대한 현금성 보상은 사업장 인근과 서울 집값을 기형적으로 끌어올리는 뇌관이 됐고, 타 IT 업계의 도미노식 성과급 인상 투쟁을 촉발했다. 지금 여력이 없는 전통 제조업과의 임금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 역시 국가 전체가 단 두 개의 기업에 집중된 결과다.

국가 경제와 자본시장, 정책 역량 전체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기업에 ‘저당’ 잡힌 꼴이다. 거시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라면 산업 사이클 하락기(Downturn)에 대비한 헤지(Hedge) 전략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했을 때의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의 맹목적인 치적 쌓기와 자본시장의 기형적인 쏠림이 방조한 이 거대한 저당물은, 산업 사이클이 고꾸라지는 순간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부채로 청구될 것이다. 장기적 성장에 대한 맹신만으로 단기적 충격을 방치하는 ‘올인(All-in)’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국가 산업과 자본시장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냉정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800조' 호남 반도체 산 넘어 산... 정부 총력전 성공하면 공급과잉 걱정

정부가 서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 규모 장기 투자를 약속했다. 용인과 평택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전제로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시장에서는 양사의 증설 속도가 향후 반도체 수급에 미칠 영향과 함께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총력전의 실행 변수를 따져보고 있다. 수년 내 전력부터 용수까지 국토 전반 인프라를 통째 재설계해야 할 정도의 난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기 클러스터 앞당기며 2기 인프라 동시 구축해야

현재 삼성과 SK그룹이 계획한 투자 총액은 4800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사업의 현금 창출력을 감안하면 두 그룹이 15년 동안 이만한 자본을 투입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투자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관심사는 공장 착공 시기다. 양사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경기 남부권 투자를 협의해왔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은 작년엔 1기 팹(Fab) 착공에 돌입했고, 삼성전자의 국가산단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양사 산단 조성을 각각 12년, 7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경우 구체적인 단축 연한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P4-P5를 포함한 기존 생산라인 증설 역시 조기 완공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가 양사의 증설 속도를 끌어올려 5년 내 D램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순서상으로도 용인·평택 1기 클러스터가 먼저 가동돼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 제2 클러스터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이를 역산하면 정부는 늦어도 2033년까지 서남권 제2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상당 부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아직 용인 일반산단조차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첨단 반도체 팹 1기에는 통상 1GW 이상 전력과 하루 20만톤 이상의 산업용수가 필요하다. 결국 정부 스스로 용인·평택은 물론 광주·전남까지 이어지는 전력망과 산업용수 공급체계를 동시 구축하는 과제를 설정한 셈이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추진을 위한 민간합동 회의를 열고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전력·용수·토지 등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 최소화를 강조했다. 행정 절차가 민간 투자 집행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투자업계에서도 정부 의지를 체감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李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인허가 속도전" 주문 용인부터 광주까지... '800조'보다 어려운 정부 숙제 정부 의지 떠나 기술적 난도 극심... 성공해도 문제 美中도 메모리 증설 경쟁... 최종 성패 담보 어려워

천문학적 단위 인프라 투자,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할까

이번 메가프로젝트에 관여하는 한 인사는 "지난 연말부터 장·차관급 실무진들의 세미나나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세수도 늘어날 예정이다 보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며 "그러나 팹 증설 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6000조원에 달하는 전체 청사진을 생각하면 인프라 속도전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여전히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수천조원 단위 투자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이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호남권 반도체 벨트 외 18.4GW 규모 AI DC 건설과 자율주행·로봇틱스 등 디지털 AI 밸류체인 구축도 포함돼 있다. 여기 필요한 산업 인프라 역시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된다.

인프라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에 20GW, AI DC에 필요한 18.4GW에 피지컬 AI 전후방 산업 수요까지 감안하면 5-7년 안에 40-50GW 이상 신규 부하를 국가 전력망에 없겠다는 얘기가 된다"라며 "발전소 많이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계통 안정성이나 효율을 고려하면 국가 전력망 운영체계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수준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최대전력 약 100GW 규모의 전력계통을 단계적으로 키워왔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앞으로 5-10년 안에 기존 최대 전력의 40%를 웃도는 신규 수요를 한꺼번에 계통에 편입해야 한다. 원전과 화석연료, 태양광, 풍력 등 전국에 분산된 다양한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 지역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계통 안정성까지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전력망 운영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기술적 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용수 확보를 비롯해 부지 조성, 건설 인력 수급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예산과 공사기간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도 사업 과정 전반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1

기 클러스터만 해도 지역민 반발 등 주민 수용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美 마이크론도 中 CXMT도 증설전... 프로젝트 성공하면 공급과잉 우려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구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더 본질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 지배력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설 속도를 끌어올릴수록 글로벌 반도체 수급 지형이 요동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반도체 담당 한 연구원은 "지금 증설 속도로는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양사가 10년간 설비투자(CAPEX)를 1000조원 이상 늘려도 수요가 반겨줄 것이라는 분석에도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라며 "그러나 3년 전 극심한 메모리 불황은 물론 현재 슈퍼사이클도 결국 전망에 실패했을 때 발생한 것이다. 양사 외 경쟁사 역시 각자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대 맹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수뇌부는 작년 하반기까지도 극심한 공급부족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에이전틱 AI 기반 추론 수요가 본격화하고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뒤에야 증설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대응이 늦어졌다는 평이다. 3년 전에는 최악의 적자 국면에서 공급사 전반이 일제히 인위적 감산에 나서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생산능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덕에 마이크론이나 CXMT 등 해외 경쟁사들도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재무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AI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증설 경쟁이 본격화하면 현재의 공급부족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비싼 가격에도 메모리를 선점하려는 AI 빅테크들 역시 세계 각지에서 나오는 증설 계획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들의 지불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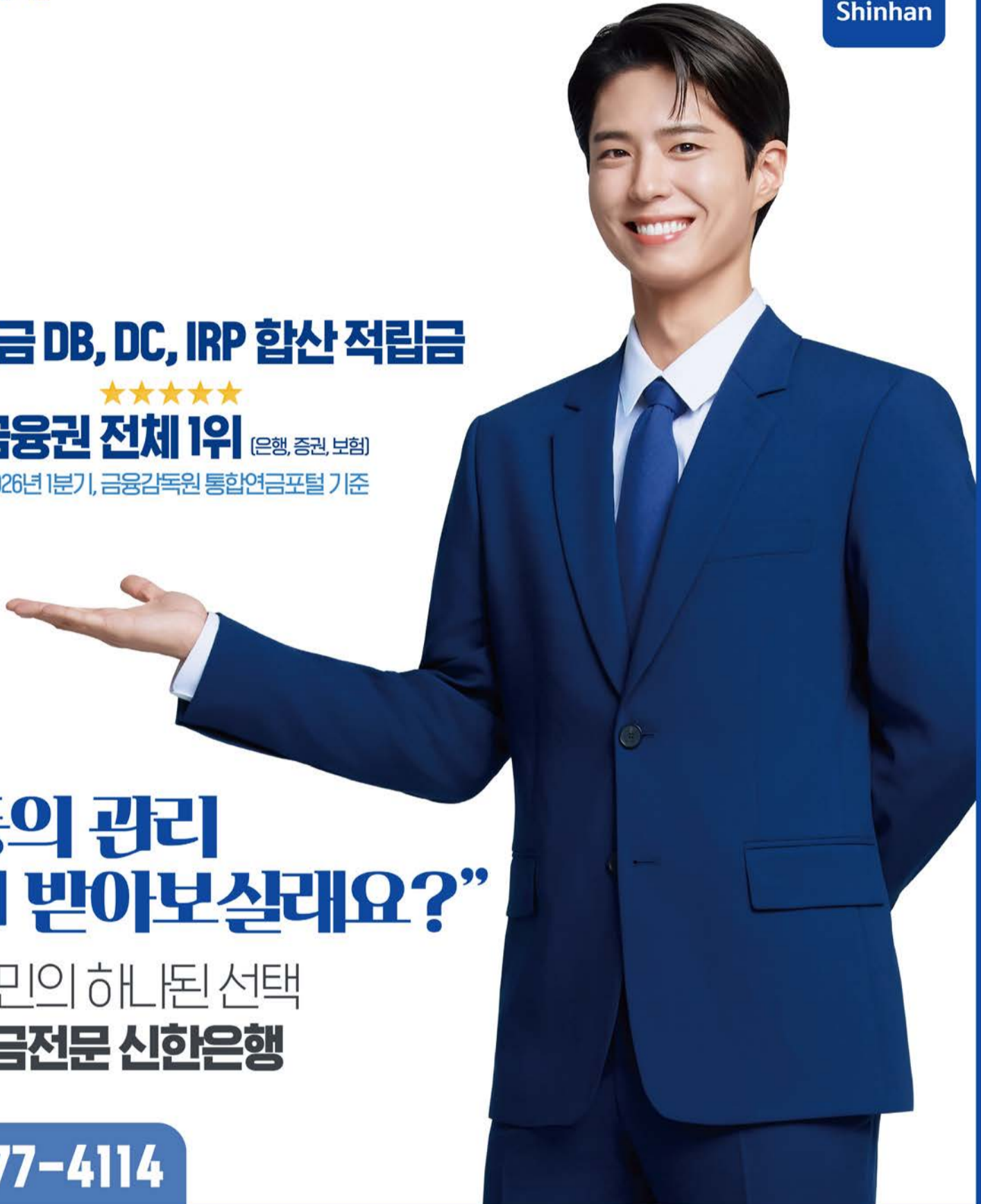
결국 정부가 국가 인프라 재설계라는 난제를 풀어내도 또 다른 시합대가 남는 셈이다. 한국의 대규모 증설과 글로벌 공급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최종 승패는 각국 정부의 의지나 실행능력보다 AI 서비스와 피지컬 AI가 실제 수요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한국도 대만처럼 서남권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정부 인프라 구상의 반만 달성해도 미중물물 대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AI 경쟁이 글로벌 패권전쟁의 일환인 만큼 민관이 맞손을 잡아도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다. 기량 피지컬 AI로 전환이 늦어지면 업계 전체가 수년 내 수요절벽을 마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정낙영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퇴직연금 DB, DC, IRP 합산 적립금



금융권 전체 1위 (은행, 증권, 보험)

*2026년 1분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1등의 관리 한 번 받아보실래요?”

우리 국민의 **해나** 된 선택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 **1577-4114**

*-(DC,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 ~ 0.45% 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1741호 (2026.04.15 ~ 2027.04.14).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6-11660-1호 (2026.04.15 ~ 2027.04.14)

“반도체 가격이 금리 결정한다”... 한국 채권시장까지 흔들는 AI

DDR5 현물가격, 국고채 금리 선행지표로
반도체 가격 오르면 경제 성장률도 올라
반도체 업황 둔화시...채권 매수 기회될 것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채권시장도 반도체 업황을 주요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미국 통화정책과 물가, 환율 등이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DDR5 현물 가격 등 메모리 가격 흐름이 한국 성장률과 국고채 금리 전망을 가능하는 선행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DDR5 D램 현물가격과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거의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권시장에서는 두 지표의 상관관계수가 0.9 수준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과 금리의 연관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상승한다.

이는 한국의 수출 증가, 성장률 상향으로 이어진다. 이후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장기금리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등 연쇄적 영향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채권 포럼에서 “DDR5 현물가격이 오르는 것이 곧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이고 코스피이며 한국 수출과 성장률”이라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DDR5 가격 상승세가 언제 둔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까지만

해도 1~2%대에 머물렀으나,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최근에는 4%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명목성장을 전망도 높아졌고, 이는 기준금리 기대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둔화하는 시점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 성장률 상향 압력도 완화되고, 장기금리 역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메모리 가격 급등은 AI 투자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AWS), 메타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대형 클라우드 공급업체)들이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을 벌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과 한국 성장률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윤 연구원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경쟁이 계속되면서 잉여 현금흐름(FCF)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AI 투자 경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 역시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DDR5 가격이 다시 과거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가파른 상승세는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 상승 기류가 둔화되는 순간 채권시장도 방향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호황이 채권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DDR5 현물가격 및 국고채 10년물 금리 변동 추이



출처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많이 건힐 경우 정부가 일부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최소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채 발행 물량이 줄거나 조기 상환이 이뤄지면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완화돼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초과 세수로 인해 국고채 발행 감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일부 존재한다”며 “다만 코스피 강세와 부동산 시장 회복세, 원·달러 환율 등도 채권시장에는 부담 요인”이라고 답했다.

‘1500원이 뉴노멀’? 엔화와 함께 추락한 원화, 금융권 부담 눈덩이



최근 평균 원달러 환율 1525원...상반기에만 108원 상승
금융권서도 ‘미스터리’...‘외화 벌어도 국내 유입 적은 듯’
中 위안화 대신 日엔화와 동조화...엔화 급락에 원화도 영향
은행 CET1비율·M&A 등 영향권...‘하반기도 변동성 크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연초만 해도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변동성 지속’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환율 안정화가 쉽지 않을 거란 뜻이다.

올해 원화는 그간의 ‘노멀’(일반적 상황)이었던 중국 위안화와의 동조화에서 벗어나, 최근 40년래 최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엔화와 동조화하는 ‘뉴 노멀’의 모양새다. 예상치 못한 원화의 약세는 금융권은 물론,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원달러 환율 평균값은 증가 기준 1525원이었다. 올해 1분기 평균 환율은 1466원, 2분기 평균 환율은 1490원이었다. 심리적 저항선이던 1500원을 뚫고 난 뒤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려와는 달리 지난 6일 외환시간 24시간 개장 이후 1538원대이던 환율이 1510원대로 내려온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던 평가다.

상반기 환율 급등은 금융권에서도 ‘미스터리’라고 불릴 정도다.

증권가에서는 수급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원화보다 외화 보유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커진 상황이란 것이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상수지 흑자에는 기여하지만 실제 국내로 외화가 유입되지 않는 ‘채투자수익수입’이 지난 1~4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고, 거주자 외화예금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외화를 많이 벌어도 실제 유입은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 엔화와의 동조화 현상도 원화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연초 이후 원화와 엔화는 피어슨 상관관계수 기준 +0.8로 강한 동조화 성향을 보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관관계수 +0.8로 강한 동조화 성향이었던 중국 위안화의 상관관계수는 올해 들어 -0.7로 뒤집혔다. 올해 원화-엔화의 상관관계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 통화쌍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된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수출로 본다면 원화가 위안화와 동조화하는 것이 맞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급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엔화와 동조화하고 있다”며 “대미투자와 해외주식

투자 등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엔화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다카이치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21조엔(약 195조원) 규모 추경을 단행하고, 2040년까지 370조엔(약 34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간 게 원화에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의문이 쌓이며 엔화 가치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고, 동조화된 원화도 함께 약세를 띠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이 같은 원화 약세는 당장 국내 금융권과 자본시장을 짓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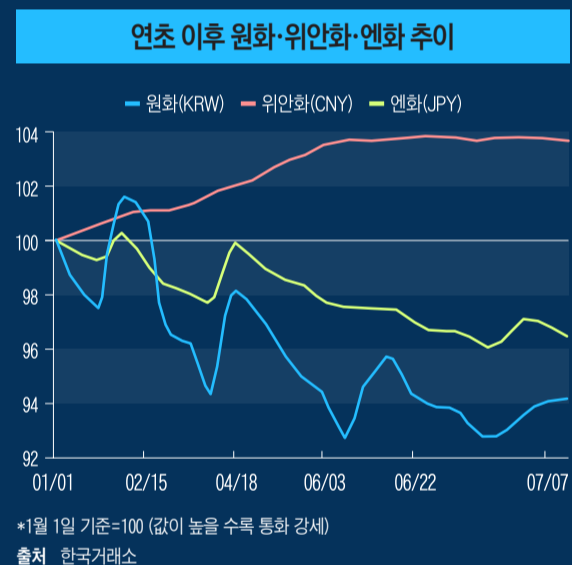
당장 고회율은 은행권 건전성 위험으로 직결된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법인·외화대출·외화 유가증권 등의 원화 환산액이 늘면서 위험가중자산(RWA)이 불어난다.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요 은행금융지주들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CET1비율이 1~3bp(0.01~0.03%p)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 환율 상승폭이 증가 기준 108원에 달했으므로, 환율에서만 최대 30bp(0.3%p) 수준의 자본력 훼손이 발생한 셈이다.

주요 금융지주의 1분기 말 기준 CET1비율은 13.1~13.6%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들은 주주환원의 기준선으로 CET1비율 13%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환율 상승이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주주환원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환율은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다. 당장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 딜이 환율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핵심 잠재 매수자인 금융지주들이 자본건전성 부담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가격을 제시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회사자 자본 취득은 CET1비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데, 주주환원정책과 엮여 있다 보니 자본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베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같은 아웃바운드(국내 기업의 해외 지분 인수) 딜도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회율 시대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금융권에서는 일단 올해 하반기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1450~1500원을 중심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거라는 게 현 시점에서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급증과 금리인상 기대감,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자본유출 지속과 대미 투자 부담, 엔화와의 동조화 지속 등 약세 요인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외환수급 여건은 2026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전망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뚜렷한 추세를 형성하기 보다 높은 변동성 속에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언제 가라앉을지가 가장 큰 변수다. 8월 달러지수는 최근의 약세를 딛고 반등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이 일주일 새 12%에서 31%로 급등한 까닭이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들 필요가 있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일리있는 선택

튼튼함도 능력도 1위인 NH투자증권이니까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더 기대되는 IMA니까
IMA¹이 투자자의 답이 됩니다

N2, IMA¹



튼튼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발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다벨 리그 테이블, ECM 주관·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MA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주민등록번호 기준
이용고객 1,043만명 (출처: 당시 고객 데이터)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액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폐쇄형으로 설정시 중도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산을 당사의 고유자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

국민성장펀드, 고밸류 겹치기 투자 계속?… 벌써부터 쌓이는 불만과 우려

국민성장펀드가 첫 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전략 사업 육성을 주도하면서 민간 자금이 일부 영역과 대기업 관련 거래로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정 동력이 약화하는 수 년 뒤에도 정책 자금이 밀어올린 기업가치가 인정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PEF) 생태계는 변혁기를 맞았다. 국민성장펀드 사업을 따낸 운용사(GP)는 민간 출자자(LP) 자금이 몰려드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의 손실 보전과 세제 혜택을 얻은 국민참여형 펀드가 5년 뒤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운용 규모가 5년간 총 150조원으로 정부 주도의 펀드 중 사상 최대다.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AI,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주요 산업군에 대한 투자와 대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운용 목표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는데, 실질을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자금이 일부 영역과 대기업 관련 거래로만 쏠리면서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투자 분야에서는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퓨리오사AI 등 AI·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K-엔비디아' 테마에 맞는 기업이 많지 않으니 투자처 선정부터 자금 집행 결정까지 속전 속결로 진행됐다. 자금 수요처보다는 공급처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됐다. 경쟁이 치열해 수백억원의 출자확약서(LOC)를 제출하고도 입장권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벤처 투자와 큰 연관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퓨리오사AI 투자자로 나섰다.

이들 기업의 가치는 민간 자본들이 투자를 검토할 때보다 크게 올랐다. 이에 대해 첨단산업 주도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특정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세계적 현상이란 의견이 있었다. 반면 유수의 투자사들도 예측이 어려운 AI·반도체 투자를 민간 금융권이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AI·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기업이 빅테크와 메모리 기업이 주도하는 거대한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내년도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을 금융권이 주도해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연 운용 목표는 30조원에 이른다. 코스닥이나 벤처기업 투자만으로는 이를 채우기 쉽지 않다. 기존에 설정된 대형 투자 테마에 맞추려면 자연스럽게 대기업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과 SK가 각지에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자금력과 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 금융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5공장 시설자금을 빌리기로 했지만 실제 인출 시기는 늦어지고 있다. 분기에 수십조원을 벌어들이는 입장에선 저금리 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지원 대상은 AI,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인데 이런 사업은 대부분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진행하니 자금이 여러 번 들어가게 된다"며 "대기업에 자금을 몰아준다는 여론이 신경 쓰이다 보니 한 그룹 내 사업 중에서도 우선 지원 순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생산적 금융 실적을 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테마로 100조원 이상의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보

AI·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민간 자금 집중 목표 달성 위해 대기업 프로젝트에 의존 금융사들은 생산적 금융 실적 채우기 고민 PEF 양극화 심화…고점 투자·회수 리스크

니, 대부분 경성적인 기업 투자나 대출로 실적을 채우고 있다. 투자처 확보 부담이 심화하면서 '사업 목적'과 다소 동떨어진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금융지주는 시니어하우징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주택 공급과 장기 운영형 개발사업을 생산적 금융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AI와 첨단산업 등 정부가 정의하는 생산적 금융과는 거리가 멀다. 부동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린다는 정책 취지와도 결이 다르다.

CJ CGV는 자회사 CJ 4D플렉스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유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콘텐츠는 펀드 지원 분야이긴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당초 방향성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 사이에선 극장산업 침체 여파로 향후 투자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적 목표와 사업성을 두고 저울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 사업 초기 정부와 각 참여 주체들이 적극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미지수다. 관 주도 사업은 후반부로 갈수록 동력이 약화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업계에선 향후 부담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고 초기에 짐을 더 지겠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이 과정에서 집행된 투자와 대출에 대한 평가는 몇 해 뒤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의 국민성장펀드 관련 투전자 손실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면책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산업은행과 민간 금융사 모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간접투자 분야에 대한 전망 역시 엇갈린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정부가 국민투자자금의 20%를 재정으로 후순위 출자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후순위 LP가 있다고 모든 프로젝트 펀드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평가가 따랐다. 이전 관제펀드들의 성적표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효과는 '소득공제'에 그칠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PEF 시장은 국민성장펀드 출범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핵심 LP로 나서고 이후 민간 금융사들이 펀드 결성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 산업은행은 기존 출자 여력 상당 부분을 국민성장펀드 쪽으로 돌렸다. 다른 금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	조성	승인 금액	지원 내용
직접투자			
3조원	첨단기금 1조5000억원 민간 1조5000억원 (재정 1500억원)	2조 5000억원	· 리벨리온(AI·반도체) · 업스테이지(AI) · 퓨리오사(AI·반도체) · 리가캠바이오(바이오)
간접투자			
7조원	첨단기금 1조5000억원 민간 5조5000억원 (재정 4500억원)	1조 2200억원	· LIG D&A(방산) · 국민참여펀드 모집완료 (7200억원) · 일반정책성펀드 1차 위탁운용사 선정
인프라투자			
10조원	첨단기금 2조원 민간 8조원 (재정 4000억원)	6조 8700억원	· 신안우이 해상풍력(인프라) · 국가시 컴퓨팅센터(AI) · 스마일게이트 데이터센터(AI·인프라) · 영양 육상풍력(인프라)
초차리대출			
10조원	첨단기금 10조원	4조 1000억원	· 삼성전자(반도체) · 이수스페셜티캐미컬(이차전지) · 네이버(AI) · 퓨처그라프(이차전지) · 비티젠(바이오) · SK바이오사이언스(백신) · 엘앤에프플러스(이차전지) · LS전선(인프라)

출처 정부. 승인지원 내역은 1~6월 실적

용사들도 생산적 금융과 위험가중자산(RWA) 분배 문제로 국민성장펀드 외엔 눈을 두기 어렵다. 1차 운용사 선정을 두고 GP간 마타도어가 줄을 이었다.

작년 금융사에서 한 펀드 출자받지 못한 한 GP는 1차 사업에 선정된 후 금융사의 출자 러브콜이 이어졌다. 펀드 매칭 자금 전액을 금융사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반면 작년부터 블라인드펀드 결성에 나선 다른 GP는 올해 자금 조달에 애를 먹었고, 결성 규모를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1차 사업에 선정된 GP들은 하반기 중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에 나선 전망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들의 몸값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5년간 국민성장펀드가 순항하고 돈이 계속 풀린다면 올해 결성한 PEF들이 양호한 성적표를 거두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점 투자에 물릴 가능성도 있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예전이면 펀드 결성에 1년이 걸렸다면 1차 운용사에 선정된 곳들은 대부분 구두 약정으로 하루 만에 자금 조달을 마쳤다"며 "올해는 비슷한 시기에 인기 섹터에 집중하는 펀드들이 대거 결성되기 때문에 향후 회수 성적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상호·선모은 기자



국회 재가동 마주한 PEF업계…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어야 하나”

최근 발의된 주요 PEF 규제 관련 법안

일자(최신순)	내용	발의	비고
26년 4월 28일	주식양수도 시 공개매수 의무화	박상혁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3월 16일	기관전용 펀드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 대한 보고 강화	이강일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3월 12일	의무공개매수 도입 및 합병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 강화	이강일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3월 6일	국민연금, ESG 투자지표 적용 의무화	이수진 의원 등	국민연금법 개정
25년 12월 31일	투자재산 운용 현황 투자자에게 제공·설명, 업무집행사원 금융위 보고의무	한정애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12월 31일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 적격요건 추가,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유동수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12월 10일	차입규제 강화(200% 이상 차입시 외부기관 의무 평가)	김상훈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11월 20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이인연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11월 13일	금융위원회 PEF 관리감독 권한 강화	김승원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10월 14일	차입규제 강화	신장식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

지방선거와 상임위 구성에 떨어진 PEF 법안들
국회 안정된 하반기부터 수면 위 등장 가능성
보수 공개 법안에 촉각, 의무공개매수도 부담
제재심 확정만 남은 MBK...PEF 논란 일단락 추세
“협회 설립도 속도조절 필요성” 목소리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은 숨 죽인 시기를 보내야 했다. MBK파트너스의 흠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후, 사회적 파장이 일며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져 나오자 운용사들은 규모를 막론하고 생존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게 사실이다.

흠플러스 사태가 1년이 훌쩍 지난 현재, 이제 공은 금융위원회에 넘어갔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확정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PEF업계 전반에 걸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 당초 예상과 달리, 올 상반기 지방선거로 PEF 규제 논의는 정치권 현안에서 다소 멀어졌고,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정부의 개각이 잇따르며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PEF 규제 법안들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속에 갇혀 있다. PEF 운용사들은 협회를 구성해 기존 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과제부터, 규제 입법을 최소화하는 일까지 어느 때보다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펀드 자금을 모으고, 포트폴리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등 본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건 변함이 없다. 다만 주요 출자 기관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쏠리며 대체투자 부문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국민성장펀드란 정책펀드가 펀드레이징 시장의 중심에 자리잡으면서 운용사들은 앞으로의 20년의 생존전략을 마련할 여유(?)가 생긴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EF 법안들은 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운용사들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수의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운용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역시 운용사 실적과 보수의 체계를 공개하는 법안이다.

해당 논의는 운용사 임직원의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한 때는 PEF업계 내 논란의 핵심이었으나 현재는 보수 공개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는 상위 몇몇 아니면 개개인의 보수를 공개할지 여부를 비롯해 구체화한 내용은 없는 상태다.

보수 공개 법안은 MBK파트너스 그리고 외국계 운용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지만, 정작 국내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 받는 토종 운용사들만 부담이 늘어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적도 결코 적지 않다.

PEF 운용사 한 대표급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 자체가 MBK파트너스 등 초국가 운용사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법안이 통과하면 국내법 테두리에서 촘촘한 감시를 받아왔던 국내 운용사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M&A 과정에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비롯해 운용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 레버리지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 등도 쟁점이다.

이 가운데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특히 운용사들의 투자 부담을 한 층 키울 수 있는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바이아웃, 즉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투자하는 대형 운용사들의 경우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금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PEF업계에만 파장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매도자 즉, 기업이든 개인 오너든 최대주주가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의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함께 급격하게 M&A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재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단 의견도 적지 않은 형국이다.

다른 PEF 운용사 대표는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PEF 관련 논의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원구성이 끝났고 개각이

완료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PEF 업계 내에서도 내어줄 건 내어주더라도, 최소한의 규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PEF 운용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그리 많지 않다.

업계 원로급 인사 몇몇이 고군분투해 정치권에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 마땅한 방안이 없다. 법안 발의 자체가 PEF 규제의 필요성이란 전제에서 출발한 만큼 공청회와 같은 토론의 장 역시 운용사들의 현황과 이해관계를 오롯이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PEF협의회를 협회로 격상하자는 움직임도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MBK 사태 이후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절실했던 운용사들은 협회 설립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을 가진 대형 운용사가 협의회를 이탈하는 등의 잡음이 일기도 했다. 운용사들은 여전히 협회 설립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상설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실무적으로 풀어나가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PEF 규제 논의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굳이 협회를 조직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협회의 필요성에 다수의 운용사들이 공감한다. 다만 MBK에 제재도 막바지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금융 당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각종 논의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며 운용사들은 손익계산에 분주한 하반기를 보낼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지웅 기자





군산 대야 초등학교
박서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거,
그게 제 **주특기**예요

체육은 하나의 과목이 아닌
열정과 인성을 배우는 가장 좋은 교육이기에

교보생명은 꿈나무체육대회를 통해
꿈꾸는 모든 아이들이 만들 더 큰 내일을 응원합니다

은행계 증권사 '자본싸움' 증자 러시... 돈 쓸 곳은 증권사뿐

KB·NH·우리 잇단 유상증자...자본 경쟁 본격화
IMA·IB 경쟁력 강화에 금융지주 자금 증권사로
신한·하나증권도 연이어 자본 확충 나설 지 관심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확충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과 기업금융(IB)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를 중심으로 모회사 자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지주 내 자금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증권사로 향하는 흐름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의 추가 증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2월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이어 6월에도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자본 확충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달 말 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자기자본은 8조원을 넘어 IMA 사업 진출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IMA 사업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NH투자증권도 지난 6월 초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조달 자금은 IMA 사업과 기업금융(IB) 경쟁력 강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증자 경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가장 먼저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선 곳은 비은행계인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한국금융지주로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12조7085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확충된 자본을 바탕으로 IMA 사업과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해 업계 선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은행계 증권사 육성의 후발주자인 우리금융그룹도 공격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5월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1조원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은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업계 11위권에 진입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자기자본을 3조원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인 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 충족과 중장기적인 초대형 IB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증권사 자기자본 및 최근 증자 현황

출처 DART, 각사

순위	증권사	자기자본 (2026. 1Q)	2026 상반기 증자	증자 후 예상 자기자본	IMA	발행어음
1	한국투자증권	12조7085억원	1조5000억원(2월 납입, 1Q 반영)	12조7085억원	○	○
2	미래에셋증권	10조2688억원	-	10조2688억원	○	○
3	NH투자증권	9조36억원	4000억원(6월 결의)	9조4036억원	○	○
4	메리츠증권	7조7925억원	-	7조7925억원	×	×
5	삼성증권	7조7017억원	-	7조7017억원	×	×
6	KB증권	7조6377억원	7000억원(2월,1Q 반영)+1조원(6월 결의)	약 8조6377억원	×	○
7	키움증권	6조2993억원	-	6조2993억원	×	○
8	하나증권	6조1069억원	-	6조1069억원	×	○
9	신한투자증권	5조7751억원	-	5조7751억원	×	○
10	대신증권	4조946억원	-	4조946억원	×	×

한 금융사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증권사 자본을 늘려주는 것이 결국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며 “다른 계열사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보다 증권사에 투자하는 편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기업금융이나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도 좋아진 만큼 자본효율성 측면에서 증권사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들이 계열 증권사에 잇달아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IMA 사업과 기업금융(IB) 경쟁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이 클수록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투자, 발행어음 등 수익 사업을 확대할 여력도 커진다. 특히 자기자본을 활용해 투자하는 IB 부문에서는 자체 북(book)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실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자본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꼽힌다.

아직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지 않은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지주들이 수익성 개선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열 증권사에 추가 자본을 투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자본 및 위험가중자산(RWA),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연계한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이자이익 확대를 담당하는 증권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는 증권 부문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은행은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이어질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와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부진도 증권사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나증권도 잠재적인 자본 확충 후보로 거론된다. 하나금융그룹의 자본 여력과 비은행 경쟁력 강화 기초를 감안하면 향후 추가 자본 확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나증권은 과거 해외 부동산과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최근에는 하나은행과의 기업금융 협업을 통해 IB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익스포저를 축소하는 동시에 기업금융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본 확충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자본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금융지주들도 계열 증권사에 공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자본이 늘어나면 영업 측면에서 얻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증자 수요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임지수 기자



돈 줄 마른 대체투자 시장... 성장펀드에 밀린 국민연금은 언제쯤 등판할까

상호금융·공제회 자금은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펀드 성격 막론하고 펀딩중인 PE들은 직격탄
국민연금 등판 손꼽아 기다리는 운용사들
성장펀드 선명성 저해할라...예년比 규모 축소 가능성



한국을 넘어 글로벌 큰 손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지난해 역대 실적을 경신했고 올해 역시 수익률에 청신호가 켜져있다. 공간이 든든하게 채워지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덜어낼 수 있었지만 연금의 막대한 자금이 자본 시장에 풀리기까진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공제회 등 국내 주요 출자자(LP)들의 관심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쏠려 있다. 대체투자부문, 한 때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했던 사모투자 부문은 주식시장에 밀려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다. 실제로 해당 부문에 출자할 의지와 여력이 있는 LP들은 현시점에서 그리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이 하루빨리 등판해 사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출자 사업에 나설 지 여전히 안개 속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PEF 운용사들의 자금을 공급하던 주요 LP 상당수는 대체투자부문의 출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호금융권은 고객들이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공제회는 가입자(수익자)들의 담보 및 신용 대출 신청이 급증하며 자금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제회들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생활비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한다. 조건은 상이하지만 '복지'에 가까운 상품이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서 금융권 대출보단 금리가 낮고 비교적 손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단 장점이 있다.

이런 고객 및 가입자들의 자산은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출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일부 공제회 등은 최근 신규 딜에 대한 출자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호금융권과 공제회의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장 빨리 체감하는 곳은 역시 PEF 운용사들이다.

신규 블라인드펀드의 모집은 물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모아야 하는 프로젝트펀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미 블라인드펀드를 결성해 드라이파우더(미소진 투자잔액)에 여유가 있는 몇몇 운용사를 제외하곤, 신규 M&A 거래에 선뜻 뛰어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PEF 운용사 한 대표급 관계자는 "과거 프로젝트펀드 출자에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과 공제회 상당수는 현재 대체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LP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야 하는 운용사들은 펀드레이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신용금고와 공제회들도 어쩔 수 없이 대체투자 부문에 흘러가는 자금줄을 잠궈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적이 나온다. 비록 지금은 주목도가 크게 떨어져 있지만, 투자 호흡이 긴 대체투자는 변동성 장세에서 LP들의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다른 한 PEF 대표는 "현재 주식 부문은 불과 한 두 달 사이에도 사모투자 연 단위에 맞먹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LP들 입장에서 대체부문에 눈에 들어올 리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자산 배분 과정에서의 중요한 축인 대체부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큰 손, 국민연금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아직 미지수다. 현재는 벤처펀드(VC)의 위탁사 선정을 진행중인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PEF 출자사업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자리는 반 년 넘게 공석이다. 지난달 말 후보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CIO 인선을 진행중

인데, 여러 하마평 가운데 내부 유력 인사가 투자부문의 수장에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CIO가 공식인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PEF 출자에 대한 사전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한 차례 출자 사업을 건너뛰면서 올해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과는 달리 규모가 예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국민연금의 대규모 출자에 '반드시' 참여할 유인이 있는 운용사들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역대 정책펀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국민성장펀드'는 변수다.

국민성장펀드가 등장하며 국민연금이 대규모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다소 덜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성장펀드와의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현시점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 한다면 자칫 성장펀드의 선명성을 저해하며 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훔플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1000억원 이상 프로젝트펀드 출자를 하지 않겠다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출자 기조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출자사업을 재개한다면 돈 줄이 마른 대체투자 시장엔 활기를 더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의 출자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현재 상황은 물론, 펀드의 매칭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민해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대체투자부문에 다시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시장 동맥경화에 캐피탈들이 다시 ‘과감’해졌다

RWA 규제에 지갑 닫던 캐피탈사들
양질의 딜 사라지고, 조달금리 상승하자
출자 규모 최소 300억원 단위까지 상향
금리 눈높이 낮추고 규모 늘려 수익성 방어 움직임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출자에 나서지 못했던 캐피탈사들이 최근 들어 조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과거 높은 금리에 출자 대상과 방식이 제한적이고 타 업권과 비교해 투자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면, 최근엔 투자 규모가 늘고 금리 조건도 다소 느슨해졌단 평가를 받는다.

인수합병(M&A) 및 부동산 시장이 위축하고,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몰려 ‘돈이 될만한 거래’에 집중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가계 대출시장이 급랭하고 굵직한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비교적 높은 금리와 소규모 출자만으로 생존이 어렵단 판단이 깔려 있기도 하다.

물론 투자 시장을 위축시킨 RWA 규제는 캐피탈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내에선 캐피탈사들이 은행을 비롯한 주력 계열사들에 비해 RWA 한도에 다소 여유가 있고, 금융당국의 감시망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단 점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 배경이란 설명이다.

최근 수도권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에 국내 한 지주계열 캐피탈사는 총 1000억원의 출자를 승인했다. 해당 사업 대주단의 총 여신 규모는 6000억~7000억원 수준이다.

금리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모두 더해 차주에 적용한 금리는 6% 내외. 해당 캐피탈사는 출자금의 1.2%가량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거래는 국내 한 대기업이 해당 데이터센터를 마스터리스(통임차)하기로 확정하며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투자시장에 가장 관심이 높은 데이터센터 개발이라고 할 지라도, 개발 사업 자체에 캐피탈사가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자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높아 여신 금리 역시 다른 업권에 비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차주 입장에서 캐피탈사를 비롯해 고금리 자금을 많이 끌어 쓸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영향이 생긴다.

캐피탈사들의 출자금액은 최근 하한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 평가도 있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두달 사이에 투자시장의 분위기가 변한 게 확연하게 느껴진다”며 “과거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대 100억~200억원을 출자하던 캐피탈사들의 최소 출자 한도가 최근엔 3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자 단위가 확연하게 달라진 건 조달금리의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다. 높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많지 않다. 개인과 기관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증시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자, 수신 기능을 갖춘 금융사들은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를 속속 올리며 대응하고 있다. 캐피탈사들이 발행하는 여전채(금융기관채 AA+ 3년물)의 금리는 연 4.2%를 넘었는데, 여전채 금리가 4%대를 넘어선 것은 2023년 이후 약 3년만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달 비용에 대한 캐피탈사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높은 조달금리에 맞대응 할 수 있는 고금리 투자 대상이 시장에 많다면, 수익률 방어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현재는 이런 투자처가 많지 않다. 특히 여전사들이 주요 투자처로 물색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개인 대출 규제가 강화하며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현재는 정부가 부실 PF사업장을 정리하겠단 취지에서 내놓은 후속조치인, 자기자본비율 제도 개선 방안도 일각에선 무용론이 제

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PF사업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5%로 시작해 4년에 걸쳐 2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 일부는 여신 조건으로 자기자본을 20%까지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자본 여력이 있는 대형 시행사들의 경우, 임차인을 확보한 비교적 안정적인 PF 사업장엔 자기자본 비율을 50% 이상까지 맞추는 경우도 등장했다. 대주단 전반적으로 조달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PF 사업에 대출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RWA 규제, PF 사업에선 대출 규제 등 복합적인 제약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면서 금융사들이 안전 자산에 더 많은 자금을 출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PF 시장에 우량 사업장이 몇 곳 안되다 보니 여전사들까지 합세해 대주단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캐피탈사들 역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단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M&A 시장(PEF 출자, 인수금융) 등에서도 캐피탈사들은 지난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RWA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1~2년 전만해도 캐피탈사들이 지갑을 닫으며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최근엔 신한·산은·JB 등 금융지주사 계열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출자 검토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PEF 운용사 한 대표급 관계자는 “현 시점 범금융권에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그나마 가장 덜 받는 곳이 캐피탈사들이다 보니, 지주사 차원에서 은행이나 보험보단 차라리 캐피탈사에서 출자하는 게 낫다는 기조가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캐피탈사들이 보다 양질의 거래를 찾아 나서려는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I·BIO 융합기술로 건강한 미래의 답을 찾다

LG는 AI와 BIO기술의 융합을 통해 암,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